

국토정책 Brief

KRIHS ISSUE PAPER



KRIHS POLICY BRIEF • No. 793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강현수 • www.krihs.re.kr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이현주 부연구위원, 서연미 연구위원, 김민아 부연구위원, 유현아 부연구위원

요약

- 1 이 브리프는 '평양공동선언'(2018년 9월)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에 대해 개성-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입지·산업 적지 분석, 기업수요 조사 및 국내·외 국가 간 특구 조성사례를 분석한 것임
- 2 개성공단의 관리운영 개선 및 고도화 전략을 위한 기업수요를 조사한 결과,
 - 완제품 생산 및 조립 분야로서 뿐만 아니라 제조원료 및 부품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향과 SW 제품, 연구개발 분야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개성공단 외 지역도 적극적으로 진출의사를 보임
 - '정치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기업활동의 안정성 보장', '인력확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통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의 지원책을 희망함
- 3 해외 국가 간 경제공동특구 조성사례(중국 쑤저우 공단, 베트남 VISP, 미얀마 델라와 특구)에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관리기구에 대한 자율성 부여,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민간협력파트너십(PPP) 구성을 통한 자원조달 등 다양한 시사점 도출

특구 조성전략 및 정책과제

- ①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의 조성 방안·전략
 - (개성공단) '정보기술 기반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 산업협력의 메카' 모델로, 관리위원회의 기업 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권한 강화,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자원 확보방안 모색
 - (해주경제특구) '수출지향형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결합형 복합단지 개발' 모델로, 남북 양측의 PPP 컨소시엄 형태의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공동개발하고 북한 당국의 관리운영 역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녹색식품가공 및 녹색기술 남북산업 협력시범지대 개발' 모델로, 남측기업의 진출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구 내 남북전용협력지구로 '(가칭) 친환경 녹색식품 및 녹색기술협력지구' 조성을 추진
- ② 정책과제
 - (법제도적 기반 마련) 효율적인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및 기반 마련
 - (인프라 구축) 남북경제공동특구 간 연계와 남북 산업협력지대로의 발전에 있어 필요한 인프라 구축
 - (정책로드맵 마련)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정책로드맵 마련

1. 남북경제공동특구 구성에 관한 남북합의 검토

남북관계 소강상태의 지속과 변화의 가능성

(남북관계 소강상태의 장기화) 2019년 초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의 교착 상황이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남북관계는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과 화해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협력을 위한 준비와 시도가 이뤄졌으나 기대했던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후에 발생한 북측의 도발적 행위에 의해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더해 2020년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방역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추진하고 있어 북한을 둘러싼 다양한 협력논의도 주요 현안에서 뒤로 미뤄진 상황임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 최근 미국대선 결과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에 따라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준비 필요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더불어 대북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통일부 2020)
- 향후 여건이 개선되어 남북이 다시 협력을 논할 시기를 대비하여 연구 차원의 대북협력방안 마련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그 출발은 최근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남북경제공동특구 구성에 관한 합의 검토

(판문점선언) 남북은 2018년 4월에 개최된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의 추진과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

- 10.4선언의 핵심 합의사업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인데 구체적으로 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② 경제특구 건설, ③ 해주항 활용, ④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⑤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사업의 이행을 포함

(평양공동선언) 남북은 같은 해 9월에 개최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경제사업들에 관해 합의, 그중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문제를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음

- 의미상 남북경제공동특구에 해당되는 서해경제공동특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서는 당시에 논의되지 않았으나 국내에서는 해당 특구가 개성공단 및 해주특구를 포함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해석하는 의견과 서해지역의 또 다른 유망 경험지역인 남포일대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 브리프에서는 전자의 해석을 근거로 향후 여건 개선 시 개성-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그림 1 남북경제공동특구, 산업협력지대 및 서해안경제벨트 개념도



출처: 이현주 외 2019, 23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2.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 여건 분석

입지여건 및 산업적지 분석

(인구현황) 해주는 황해남도에서 인구 20만 명 이상의 유일한 도시이며 개성시는 사리원시와 함께 황해북도에서 인구 30만 이상인 도시로 꼽히고 있음

(교통여건) 개성시는 평양-개성 간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해주시는 개성에 비해 개성-평양 교통축과 이격되어 있으나 해주항을 보유하고 있어 대남·대중 연계가 유리

(산업적지 분석결과) 해주시와 개성시 모두 산업적지로서 점수가 높은 지역이 시내를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며 평양-개성 교통인프라가 지나는 금천군과 평산군에도 넓은 면적의 산업적지가 분포, 개성과 해주 모두 산업 입지 적합성이 높은 지역이 농업용도로 사용

- (개성시) 농업지역·기개발지를 미제척 시 높은 점수의 산업적지는 개성시 시가지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분포
- (해주시) 해주항에서 가까운 해안 주변 평야가 산업적지로서 높게 평가

북한 및 남한의 수요 분석

(북한의 수요) 현재까지 27개 경제특구 및 개발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특구 유형 지정, 북한기관과 기업소의 참여, 과학기술의 육성과 정보기술산업을 강조하는 경제개발구 정책을 추진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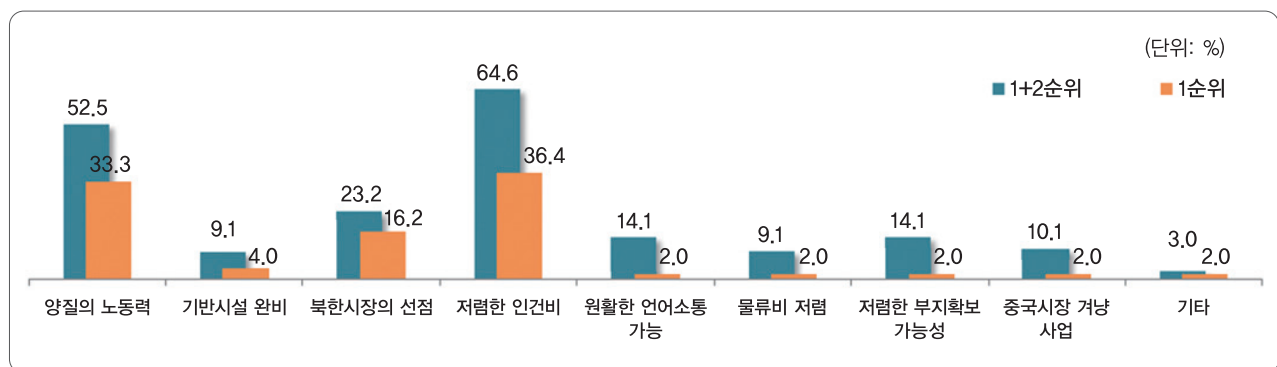
- 북한은 개성-해주 일대에 위치한 유일한 경제개발구이자 국가급 개발구인 '강령국제녹색국제시범구'에 대해 강령의 자연생태환경과 농수산업 분야 자원을 활용한 세계적인 녹색지대로 개발할 계획

(남한의 수요) 남북 간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데 있어 관건은 현재 시점에서 협력모델을 어떻게 구축하고 과거 협력방식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남북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특구를 조성하느냐일 것임

이를 위해 주요 참여주체인 기업들의 참여의향과 동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한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 이하에서는 기업수요 조사에 대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함

- (개성공단 입주 동기) 1+2순위 중복응답 결과, ‘저렴한 인건비’, ‘양질의 노동력’, ‘북한시장의 선점’ 순으로 나타났음
 - 기업별로는 기진출기업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 ‘양질의 노동력’, ‘기반시설 완비’ 순인 반면, 미진출 기업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 ‘양질의 노동력’, ‘북한 시장의 선점’ 순으로 나타나 미진출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북한시장 선점’ 요인을 주요한 동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 기업유형별로는 일반중소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벤처기업은 ‘양질의 노동력’을 각각 주된 동기로 꼽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그림 2 개성공단 입주하고자 하는 동기(1순위, 1+2순위)



출처: 이현주 외 2019, 74.

표 1 개성공단 입주하고자 하는 동기(1+2순위)

구분	사례 수	양질의 노동력	기반 시설 완비	북한 시장의 선점	저렴한 인건비	원활한 언어 소통 가능	물류비 저렴	저렴한 부지 확보 가능성	중국시장 겨냥사업	기타
전체	(99)	52.5	9.1	23.2	64.6	14.1	9.1	14.1	10.1	3.0
기업 구분	기진출기업	(20)	40.0	35.0	5.0	75.0	25.0	20.0	—	—
	미진출기업	(79)	55.7	2.5	27.8	62.0	11.4	6.3	17.7	3.8
	일반 중소기업	(44)	50.0	2.3	36.4	70.5	6.8	6.8	20.5	6.8
	벤처기업	(28)	67.9	3.6	17.9	46.4	21.4	3.6	10.7	17.9
	스타트업	(7)	42.9	—	14.3	71.4	—	14.3	28.6	28.6

출처: 이현주 외 2019, 75.

- (개성공단 재개조건) 개성공단 입주(재입주) 의향이 있는 경우 개성공단의 재개조건(1+2순위)으로는 ‘정치 환경의 안정성’, ‘리스크 안전장치 보완’, ‘남한정부의 자금 지원 등 지원 보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유형별로도 모두 ‘정치환경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재개조건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재입주 시 애로사항)** 개성공단 재입주 시 판단되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1+2순위)도 '정치 및 남북관계로 인한 중단위험'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운영방식 만족도)** 기존 진출기업에 대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기업의 50%가 만족, 40%가 보통, 10%가 불만족을 표시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 **(진출분야)** 개성공단 입주 시 진출코자 하는 분야로 '완제품 생산 및 조립' 분야가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조원료 부품 생산(11.1%), SW 제품 및 콘텐츠 개발(8.1%), 연구개발(5.1%), 계획·설계·디자인(4.0%) 등의 순으로 나타나 향후 개성공단 고도화 전략과 연계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 완제품 생산 및 조립분야로서 뿐만 아니라 제조원료 및 부품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향과 SW 제품, 연구개발 분야 등도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개성공단의 고도화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큼
- **(개성공단 외 진출의향)** 향후 여건 개선 시 개성공단 외 기타 지역인 북한의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또는 해주 지역으로 진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전체 56.5%로 높게 나타났음
 - 기업별로 미진출 기업이 59.4%로 기진출 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미진출 기업 중에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71.4%라는 비중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진출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개성공단 외 진출이유)**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북한 시장의 선점 및 신시장 개척 등이 진출이유로 꼽혔음
- **(기타 의견)** 남북공동특구 산업단지에 필요하거나 바라는 점으로 '정치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기업활동의 안정성 보장', '인력확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통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엔지니어링·지식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제시되었음

3. 국가 간 경제공동특구 구성에 관한 국내·외 사례

[남북한 사례] 개성공업지구

기존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향후 여건이 조성되어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게 되면 공단의 고도화를 위한 업종 다각화와 외국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국내기업 지원 기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성공단의 확장성을 제약하는 요인인 전략물자 통제 및 해외수출제약 요인도 해소될 필요가 있음

[해외 사례] 중국 쑤저우공단, 베트남 VSIP^(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미얀마 띵라와 특구^(Thilawa SEZ)

(중국 쑤저우 공단)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관리기구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 부여, 상호 인적교류 및 교육시스템 도입,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지속가능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첨단산업 및 미래산업 업종구성과 글로벌 기업 유치

(베트남 VSIP) 개발과 관리·운영 기능통합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고려,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환경조성, 글로벌 수준의 개발사와의 협업, 개발초기단계부터 관리운영비 충당방안 마련

(미얀마 땔라와 특구 Thilawa SEZ) 양국의 정책부합성 추구,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주도 해외투융자제도를 통한 국내기업 지원 확대 제도, 양국가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체제(PPP) 구성을 통한 자원조달 방안 마련

표 2 국가 간 경제공동특구 조성에 관한 국내외 사례 분석 요약

구분	국내	해외		
	개성공업지구	중국 쑤저우 공단	베트남 VSIP(빈증 I)	미얀마 땔라와 특구 (Thilawa SEZ)
협력방식	• 민간협력 → 민관협력	• 국가협력 간 협력(G2G) – 중국-싱가포르	• 국가협력 간 협력(G2G) – 베트남-싱가포르	• 국가협력 간 협력(G2G) – 미얀마-일본
당국 간 협력체제	•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 •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북) • 남북공동위원회(상설협의기구)	• 중국-싱가포르 연합협조이사회 • 양자실무위원회 • 연락기구(2개 기구)	• 별도 당국 간 협력체제 미확인	• 별도 당국 간 협력체제 미확인
개발사	• 현대아산, LH (남측기업으로만 구성)	• 중국-싱가포르 쑤저우 공업원구 개발유한공사 (JV) • 중국 컨소시엄: 싱가포르 컨소시엄(35:65) (※ 초기 지분구조)	• 베트남-싱가포르 VSIP 조인트 벤처(JV) • 베트남 국영기업: 싱가포르 컨소시엄(49:51)	• 미얀마-일본 땔라와 개발사 (MJTD) • 미얀마 민관 컨소시엄: 일본 민관 컨소시엄(51:49) • 일본측 자국 민관 기관 또는 기업들로만 구성
관리운영기구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쑤저우 공업원구 관리위원회	• 개발사(VSIP JV)의 개발 및 관리운영 통합	• 땔라와 특구 관리위원회
성공요인	• 양측 법체계 마련 • 남측 국고 지원을 통한 공단 경쟁력 확보	• 양국의 정책 수요기반 • 양국 정부, 특히 관리위원회에 대한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지원과 권리이양 • 상호교환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 양국신뢰를 바탕으로 공동개발 · 공동운영 시스템 • 싱가포르의 글로벌 수준의 공단운영 시스템 적용	• 철도도로 및 항만과의 접근성 • 저렴한 인건비 • 양국 간 정책 부합성 • 개발협력국인 일본의 민관협력체 구축 및 지원 확대
도전과제	• 국고 지원에 따른 국내 비판 여론 및 재정부담 • 전략물자 반입통제 및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수출제약	• 양국 정부 간 개발목표 및 방식에 대한 입장차이 • 투자국 내 타개발구와의 경쟁	• 단지 외부 인프라 재원을 지방 정부가 PPP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입주기업의 비용 증가(외부 요인) • 국내 다른 산업단지의 개발로 경쟁력 약화 • 기술인력 부족	• 특구개발에 따른 현지 이주자들에게 대한 보상 문제

출처: 이현주 외 2019, 139.

4.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및 정책과제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개성공단)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 (산업협력모델) '정보기술 기반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 산업협력 메카'로 조성하는 모델을 제안, 이를 위해 단계별로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분야의 산업협력과 IT 및 신산업 분야 협력을 통한 고도화 추구
- (추진체계 및 자원조달) 관리위원회의 기업지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독립적 권한 강화, 조직별 업무 명확화를 통한 협조체계 개선,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모델을 위한 방안 마련, 외국자본 및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국고부담 경감, 입주기업에 대한 자체 관리유지 자원 마련

(해주경제특구)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 **(산업협력모델)** '수출지향형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결합형 복합단지 개발' 모델을 제안, 이를 위해 농식품 가공산업 및 대중국 곡물수출기지로 육성, 수출지향형 건자재 산업 및 기계 부품 산업 생산기지 조성,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해주시의 도시화와 도시개발 견인
- **(추진체계 및 자원조달)** 남북 양측 PPP 컨소시엄 형태 합작기업 설립을 통한 공동개발, 외국기업의 참여 추진, 북측 관리기구의 관리운영 및 남측기관의 지원 검토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 **(산업협력모델)** '녹색식품가공 및 녹색기술 남북산업 협력시범지대 개발' 모델 제안, 이를 위해 시범구 내 (가칭) '남북 친환경 녹색식품 및 녹색기술협력지구' 조성 추진
- **(추진체계 및 자원조달)** 우선적으로 북측 경제개발구 내 남한기업 진출을 위한 법제도적 보장 필요, 북측기업 (기업소)과의 합작을 통한 남북 합작기업(JV) 설립(외국기업 참여도 고려), 국내 유관기관 및 정책금융기관의 재정적·운영적 지원 고려

표 3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의 산업협력모델과 추진방안

구분	개성공단	해주경제특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산업협력 모델	• 정보기술 기반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 남북 산업협력 메카	• 수출지향형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결합형 복합단지 개발	• 녹색식품가공 및 녹색기술 남북산업 협력 시범지대
	• 고부가가치를 가진 소재·부품 생산기지로 조성	• 농식품 가공산업 및 대중국 곡물수출기지로 육성	• 시범구 내 (가칭) 친환경 녹색식품 및 녹색 기술협력지구'의 조성
	• IT 및 AI, 모바일, 공유플랫폼, SW 등 신산업 협력 • 신기술기반 R&D센터, 기술기반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센터 건립 운영	• 수출지향형 건자재 산업 및 기계부품 산업 생산기지 조성 •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해주시 도시 화와 도시개발 견인	• 농수산물 식품 가공기지 및 대중국 수출 기지로 조성 • 녹색산업기술단지 및 생태환경보호 기술 단지 조성
추진체계 · 자원조달	• 관리위원회의 기업지원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독립적 권한 강화 • 조직별 업무 명확화를 통한 협조 및 모니터링 구조로 개선 •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모델을 위한 방안 모색 • 기업 활동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외국자본 및 외국기업의 유치 • 입주기업에 대한 자체 관리 및 유지 재원마련	• 해주경제특구 조성에 있어 새로운 형태의 조성방식 논의가능 • 남북 각각 PPP 컨소시엄 형태 합작기업 (JV) 설립하여 공동개발(미얀마 딸라와 SEZ 사례) - 북측컨소시엄(당국+기업소) 및 남측컨소 시엄(당국+기업+외국기업 또는 MDB) 구성(안) • 북측 관리기구의 관리운영 및 남측 기관의 지원 - 북측의 관리운영 역량 제고 및 이를 뒷받 침하는 법제도적 틀 마련 필요 - 남측 해외인프라지원기구 및 민간금융 기구의 개발지원 확대	• 우선적으로 북측 경제개발구내 남한기업 진출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보장 필요 • 북측기업(기업소)과의 합작을 통한 남북 합작기업(JV) 설립(외국기업 참여도 고려 가능) • 국내 유관기관 및 정책금융기관의 재정적· 운영 지원 고려

출처: 이현주 외 2019, 152.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효율적인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공단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개선 필요
 - 기업 활동의 안정성 보장하는 법제도적 안전장치와 전략물자 제한 등 규제 완화
- 해주경제특구 구성에 있어 남북이 주도가 되면서 외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개발모델과 효율적인 특구 관리운영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틀 마련
- 북측의 경제개발구인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진출 및 남북 간 전용산업협력구인 ‘(가칭) 친환경 녹색식품 및 녹색 기술협력지구(Green and Eco-Friendly Technology Cooperation Zone)’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한 협력 추진

(인프라 구축) 남북경제공동특구 간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개성-해주-강령일대 각 특구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성-해주 간 도로 건설 추진
- 해주항만의 개발을 통한 물류여건 개선 필요

(정책로드맵 마련) 비핵화 진전에 따른 제재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정책로드맵 마련

- ‘대북제재 여건하’에서는 북측 개발계획과 남측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남북경제공동특구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 마련, 학술적 교류 기회 등을 활용하여 북측과 특구개발 마스터플랜의 초안을 작성해 나가는 노력 필요
-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로 제한적 협력이 가능한 시기’에는 우선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개성공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업주 지원과 동시에 개성공단의 운영관리 및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해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현지공동조사 및 공동개발계획 수립과 법제도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 등의 준비 필요
- ‘대북제재가 상당히 완화된 시기’에는 북측의 경제개발구인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내 남북전용 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개성공단, 해주경제특구 및 강령국제녹색시범구를 연계해 산업 협력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당국 간 협의 필요

참고문헌

통일부. 2020. 이인영 통일부장관, 경제계 인사 간담회 개최. 11월 23일, 보도자료.

※ 본 자료는 국토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수행한 ‘이현주 · 서연미 · 김민아 · 유현아 · 임을출 · 이석기 · 김두환. 2019. 한반도 신경계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남북경제공동특구를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의 내용을 수정 · 보완해 정리한 것임.

이현주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부연구위원(hjlee@krihs.re.kr, 044-960-0240)
서연미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ymseo@krihs.re.kr, 044-960-0215)
김민아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부연구위원(minakim@krihs.re.kr, 044-960-0188)
유현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hayou@krihs.re.kr, 044-960-0310)



KRIHS 국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홈페이지 www.krihs.re.kr
팩스 044-211-4760

